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도전과 과제

정보경영연구원 강연

2022년 4월 6일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대선 공약집)

남북관계 정상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 남북관계 정상화와 공동번영 추진
-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
-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설립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전면 개편

국익우선 외교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 상호존중에 입각한 한중관계 구현
-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을 확대
-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경제안보외교 적극 추진
-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여외교 실천

튼튼한 안보국방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 대응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환경

국제체제의 분절화(Systemic Fragmentation)

- 지정학의 귀환, 강대국 경쟁의 재현
- 국제제도와 레짐의 약화 현상 – 파리기후협약, INF, WHO, WTO
-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능부전 – '各自圖生'의 시대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격 침공
- 서구사회의 일치된 대응 – 미/유럽 대 중/러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 구도

3重苦에 처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 남북대화 단절 - 한국의 '운전자' 역할에 실망, 추가적인 역할 기대 포기한 듯
-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자발적 고립

윤 당선인 Foreign Affairs 기고문

FOREIGN AFFAIRS

Subscribe SIGN IN

MENU Current Issue Archive Books & Reviews Anthologies Newsletters SEARCH

South Korea Needs to Step Up

The Country's Next President on His Foreign Policy Vision

By Yoon Suk-yeol February 8, 2022

South Korean presidential nominee Yoon Suk-yeol announcing his candidacy, Seoul, June 2021
Pool / Reuters

Most-Read Articles

FOREIGN AFFAIRS: 100 YEARS

Force and Diplomacy in the Nuclear Age
Henry A. Kissinger

The Perilous Long Game in Ukraine
Compromising With Putin May Be America's Best Option
Samuel Charap

A Country of Their Own
Liberalism Needs the Nation
Francis Fukuyama

Putin's Pyrrhic Victory

Foreign Affairs 기고문의 기본 관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

-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당사자인 동시에,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
- 국제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로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찬 나라, 혁신적인 나라, 매력있는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임.
-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실질적 협력 추구

현 정부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시

- 문 정부는 외교력을 대북관계에 올인,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위축되고 한미동맹 표류
- 현 정부는 세계 각지의 자유민주주의 규범 파괴와 인권 훼손에 침묵하고 기후변화와 전염병 대응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 글로벌 사회의 주요 현안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점증하는 북한 위협을 방치하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태세 약화

(1) 한미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현재

- 한미간 신뢰 저하, 조율 미비, 전략대화 미흡
- 대북정책 이벤트 위주 접근
-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방위태세 약화
- 미국과 한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 불일치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
- 군사, 경제공급망, 공중보건, 사이버 분야 등을 아우르는 복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포괄적 경제안보대화를 가동해 첨단산업분야의 양국 기업 간 협력과 투자를 지원

(2) 한·중 호혜관계 구축

현재

- 이념편향 외교로 한미동맹과 미일 안보협력 구조 약화
- 미중 전략경쟁 심화 – '안미경중' 혹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어려움
- 중국은 제1 무역상대국,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협력 필요

원칙 있는 외교로 새로운 한·중 호혜관계 구축

- 상호 핵심이익과 정책기조를 존중하는 가운데 안보문제가 경제 이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
-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억지력 확보는 한국의 주권 사항
-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를 발전시키면서 공동이익에 기반한 호혜적 관계를 구축

(3) 남북관계 정상화

현재

- 평화에 올인했는데 평화체제 진전은 오히려 퇴보
- 9.19 군사합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로 불필요한 충돌 줄이는 성과
-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지속
- 문재인 정부 운전자론 – 2019년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이후 교착

완전한 비핵화는 모든 대북정책의 전제

- 북한 위협 대비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 독자적 대공 미사일 방어망 구축
-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 -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가 이행되면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
- 북한 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문화적 소통을 증진

(4) 인도태평양 질서와 일본

현재

-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등에 대해 미온적 자세
- 한일관계는 과거사에 매몰,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악화 일로
- 과거사로 인해 미래세대를 위한 한일관계 업그레이드 소홀

인도태평양 질서 협력, 한일관계 개선

-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질서를 촉진
- 쿼드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 역내 다자간 협력체에서 역할 확대
- 한·미·일 안보공조 활성화
- 김대중-오부치 2.0 시대, 한일관계를 정상화, 한·일 셔틀외교 재개

(5) 글로벌 기여와 역할 강화

현재

- 그동안 주요국 양자관계에 치중된 편향적 외교 추진
-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협력 대상 지역의 다변화, 다자/소다자 형태의 협력 네크워크 구축 및 선도적 역할 미흡
- 미중 경쟁 및 코로나19 시대 자국 중심주의 심화에 대처할 필요 증대
- 공급망, 무역/통상/투자, 데이터 주권 확보 필요

지역별, 이슈별 특화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외개발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엔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 실현에 기여신흥국 대상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달성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 개방적이고 안전한 국제 사이버 안보질서 구축에 기여 -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서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선도적 역할 수행

지정학의 부활(Return of Geopolitics)

지정학적 경쟁의 부활

- 소련 붕괴 이후 국제질서의 성격과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
- 무역자유화, 핵비확산, 인권, 규칙기반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법치 등

현상타파 세력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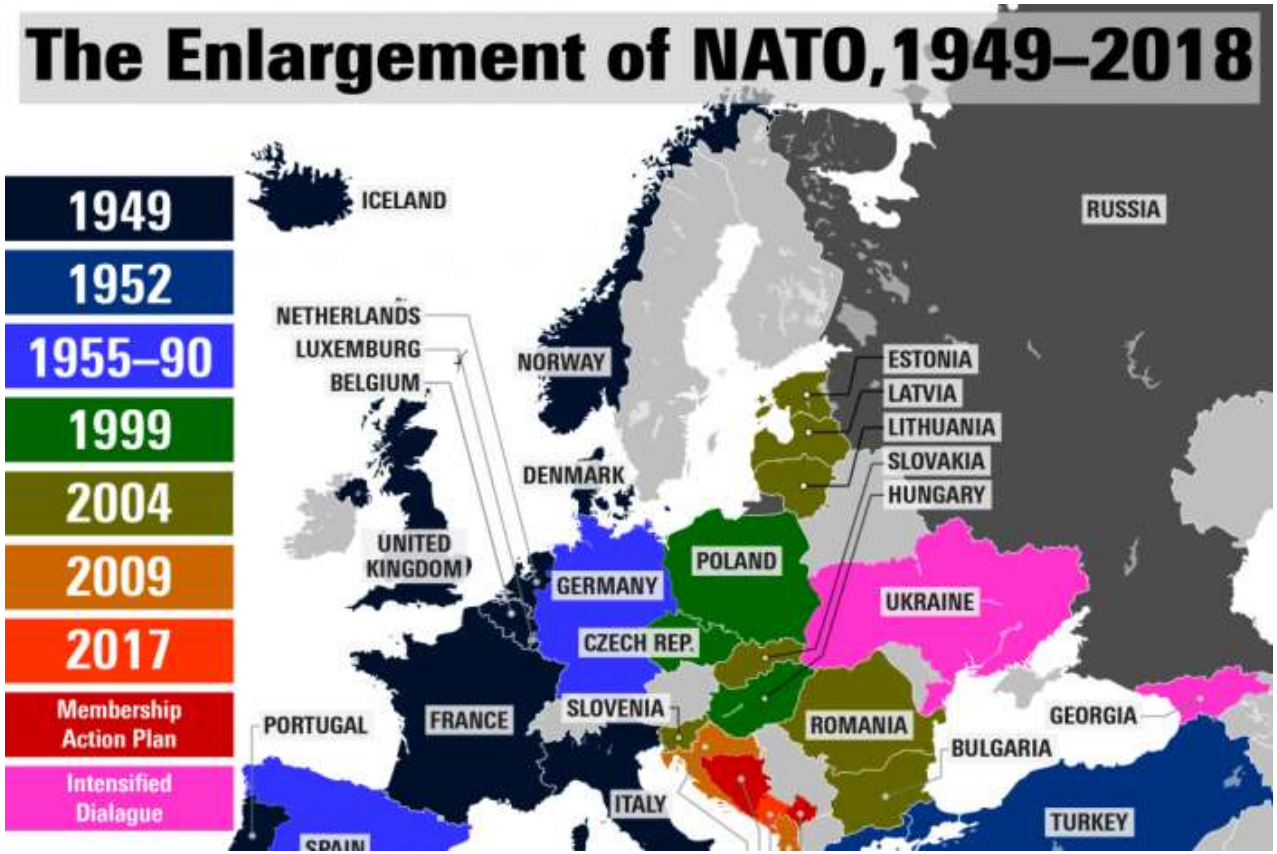
- 중국, 이란, 러시아 – 현재의 국제질서(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주도하는)를 타파해야 한다는 공감대
-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 강화 - 민족주의적 경쟁의식, 영토 분쟁, 해군력 현대화, 역사전쟁

Walter Russell Mead,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201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래픽: 조선일보(2020.2.25)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 1997년 소련 붕괴 후 NATO의 동진 - 2004년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나토 가입, 2016년 폴란드·루마니아에 MD 배치, 2021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추진
- 러시아의 반격 -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점령, 2015년 시리아 내전 개입, 우크라이나 침공

폭탄 맞은 국제유가, 올 200달러 갈 수도

그래픽: 매일경제 (2022.03.08)

중국의 해양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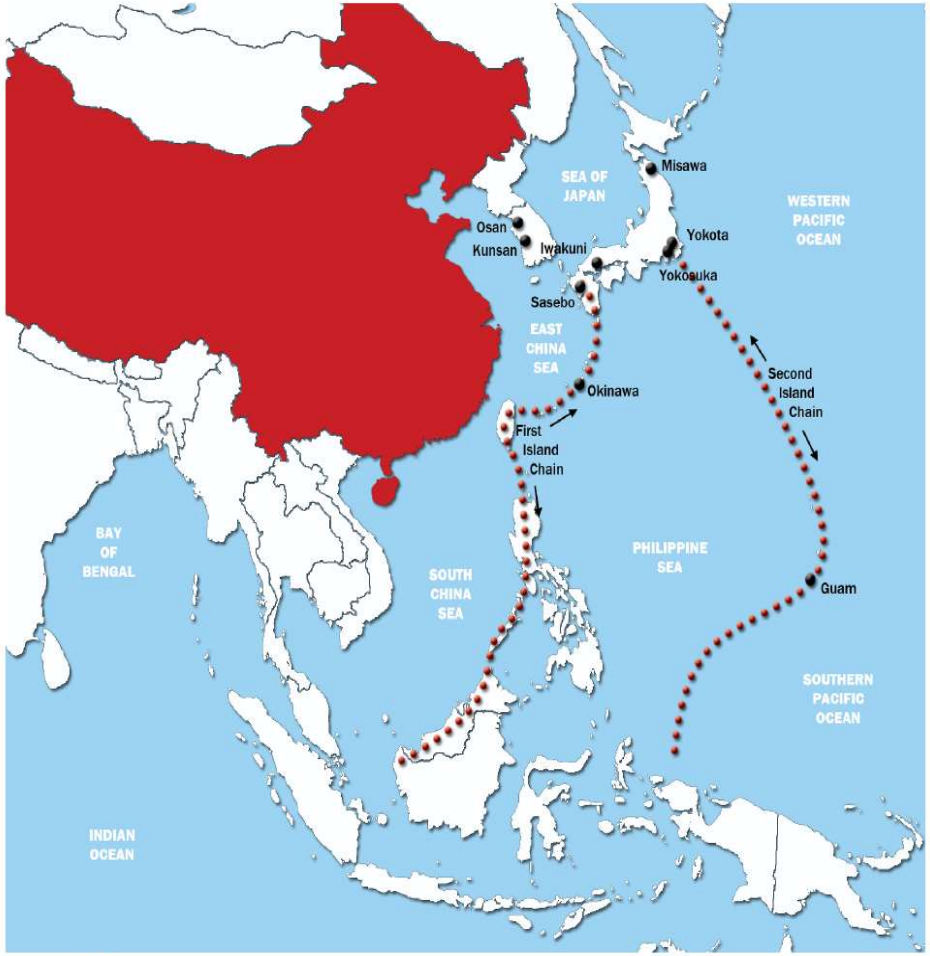


Image: CS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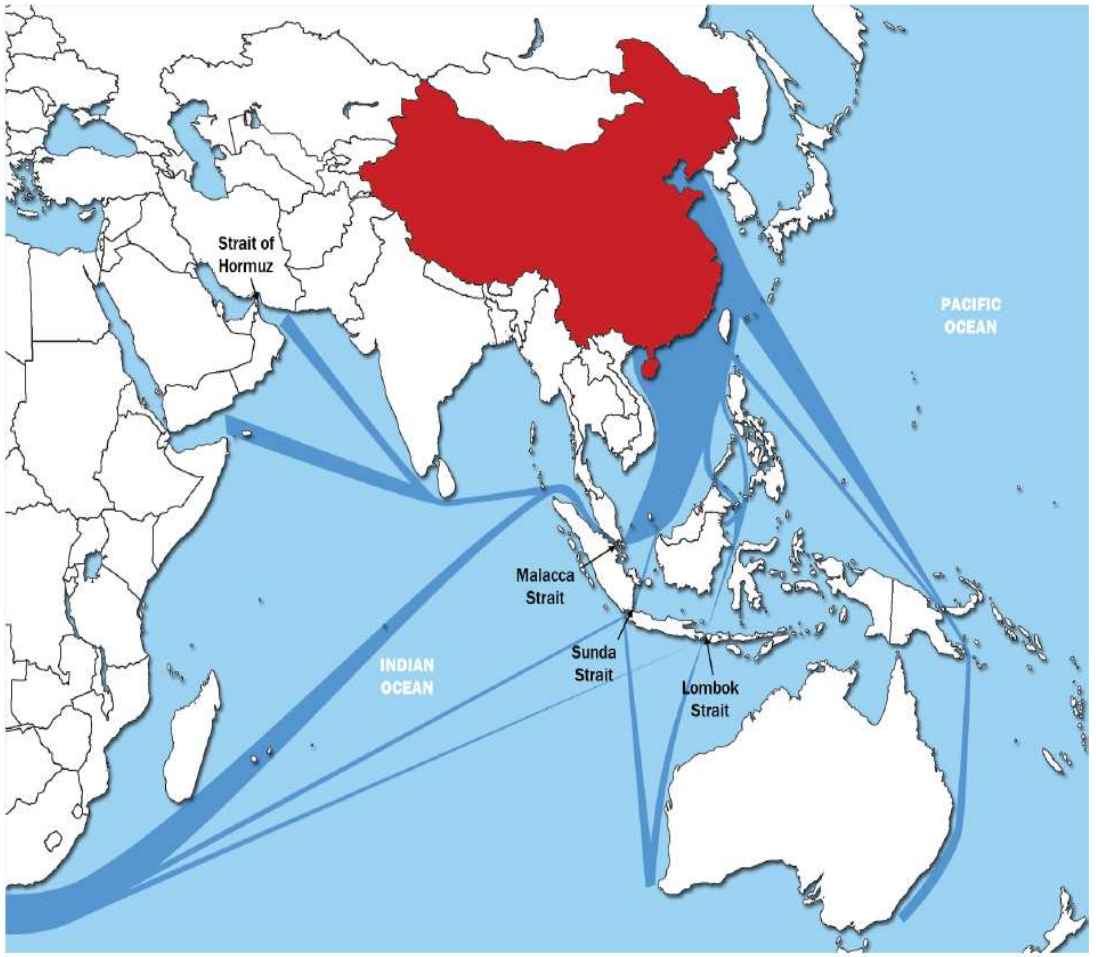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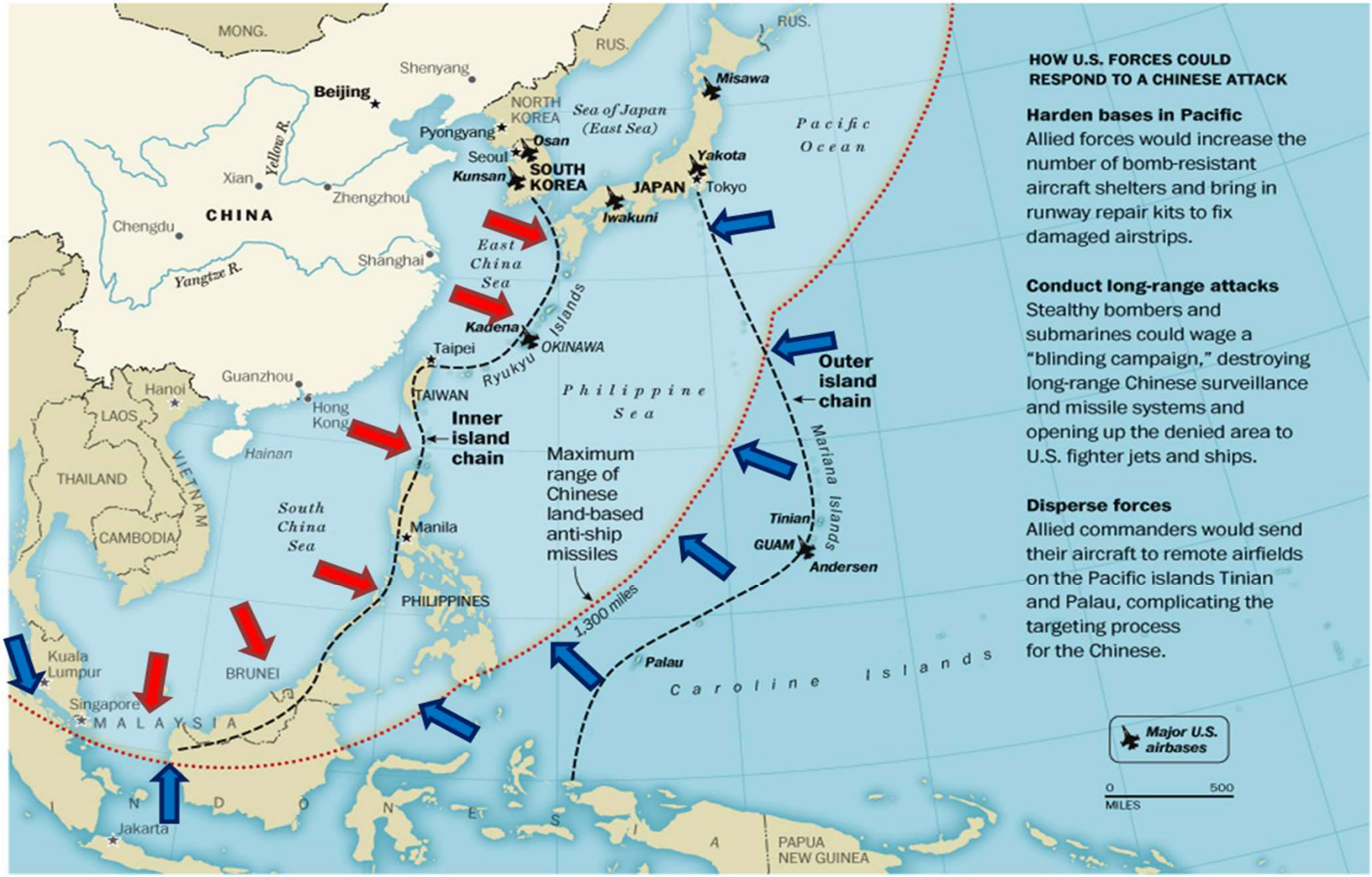


Image: CSBA

1) First and Second Island Chains
2) Major sea routes to China

A2/AD: Keeps U.S. Out, Chinese In



http://globalbalita.com/wp-content/uploads/2012/10/Air-Sea-Battle-map.jpg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Spratly Island, 난사군도)

Cuarteron Reef
U.S. Board of Geographic Names: Cuarteron Reef
China: Huayang Jiao, 华阳礁
Philippines: Calderon Reef
Taiwan: Huayang Reef, 華陽礁
Malaysia: Terumbu Calderon
Vietnam: Bãi Châu Viên

Fiery Cross Reef
U.S. Board of Geographic Names: Fiery Cross Reef
China: Yongshu Jiao, 永暑礁
Philippines: Kagitingan Reef
Taiwan: Yongshu Reef, 永暑礁
Vietnam: Đá Chữ Thập

Mischief Reef
U.S. Board of Geographic Names: Mischief Reef
China: Meiji Jiao, 美济礁
Philippines: Panganiban Reef
Taiwan: Meiji Reef, 美濟礁
Vietnam: Đá Vành Khăn

Subi Reef
U.S. Board of Geographic Names: Subi Reef
China: Zhubi Jiao, 渚碧礁
Philippines: Zamora Reef
Taiwan: Zhubi Reef, 渚碧礁
Vietnam: Đá Su Bi

Source: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CSIS, Washington, DC, https://amti.csis.org/
China has 20 outposts in the Paracel Islands and 7 in the Spratlys. It also controls Scarborough Shoal, which it seized in 2012, via a constant coast guard presence, though it has not built any facilities on the feature. Since 2013, China has engaged in unprecedented dredging and artificial island-building in the Spratlys, creating 3,200 acres of new land, along with a substantial expansion of its presence in the Paracels.

중국의 군사굴기 (건국 70주년 열병식)

건국 70주년 기념일(1일)을 맞아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1만5000여 명의 병사와 최첨단 신형 무기가 대거 등장했다. 1 최대 사거리 1만5000㎞로 북미지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 군인들이 2인용 공격헬기에 앉아 이동하고 있다. 3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과 장쩌민 전 주석(오른쪽), 후진타오 전 주석이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다. 4 여군들이 행진하는 모습. [AP·로이터=연합뉴스]

* 그래픽: 중앙일보(2019.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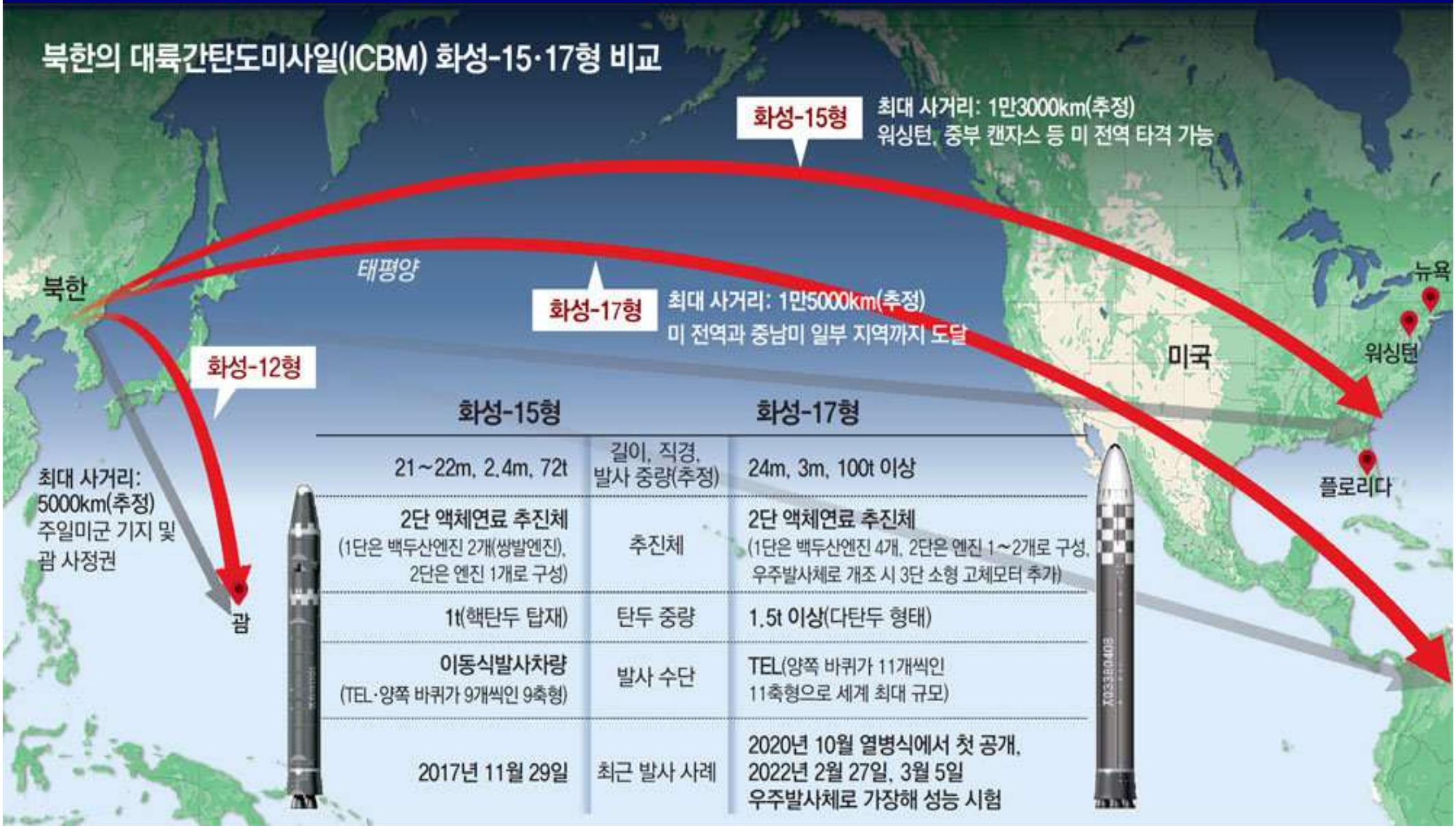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

아주경제 (2017.12.6)

풍계리… 새 핵실험 준비하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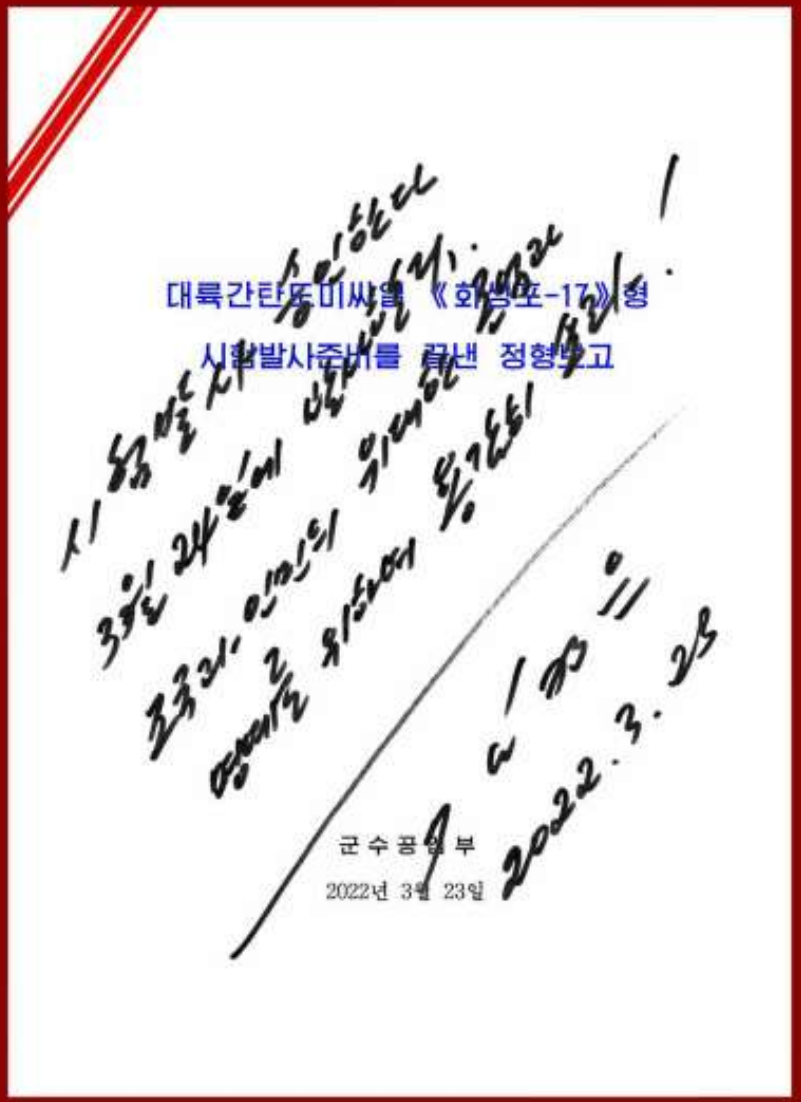
그래픽: 조선일보(2022.3.9)

북한의 신형 ICBM 실험



동아일보(2022.3.12)

“시험발사 승인…용감히 쏘라” 친필 명령



노동신문 캡쳐, 2022.3.25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By Joseph R. Biden, Jr. March/April 2020

Biden campaigning in Elkader, Iowa, December 2019

Calla Kessler / The New York Times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

- 세계의 진보를 이끌고 공동의 행동을 인도하는 미국의 행동은 국내에서 출발
- 미국은 '힘을 통한 모범(example by our power)'이 아니라 '모범의 힘(power of our example)'으로 세계를 리드
- 취임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

-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통상정책도 국내에서 출발
- 중국에 대해서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의 일탈적 행위에 대응

세계의 리더 자리로 복귀

- 미국은 국제사회의 룰을 만들고 합의를 도출하며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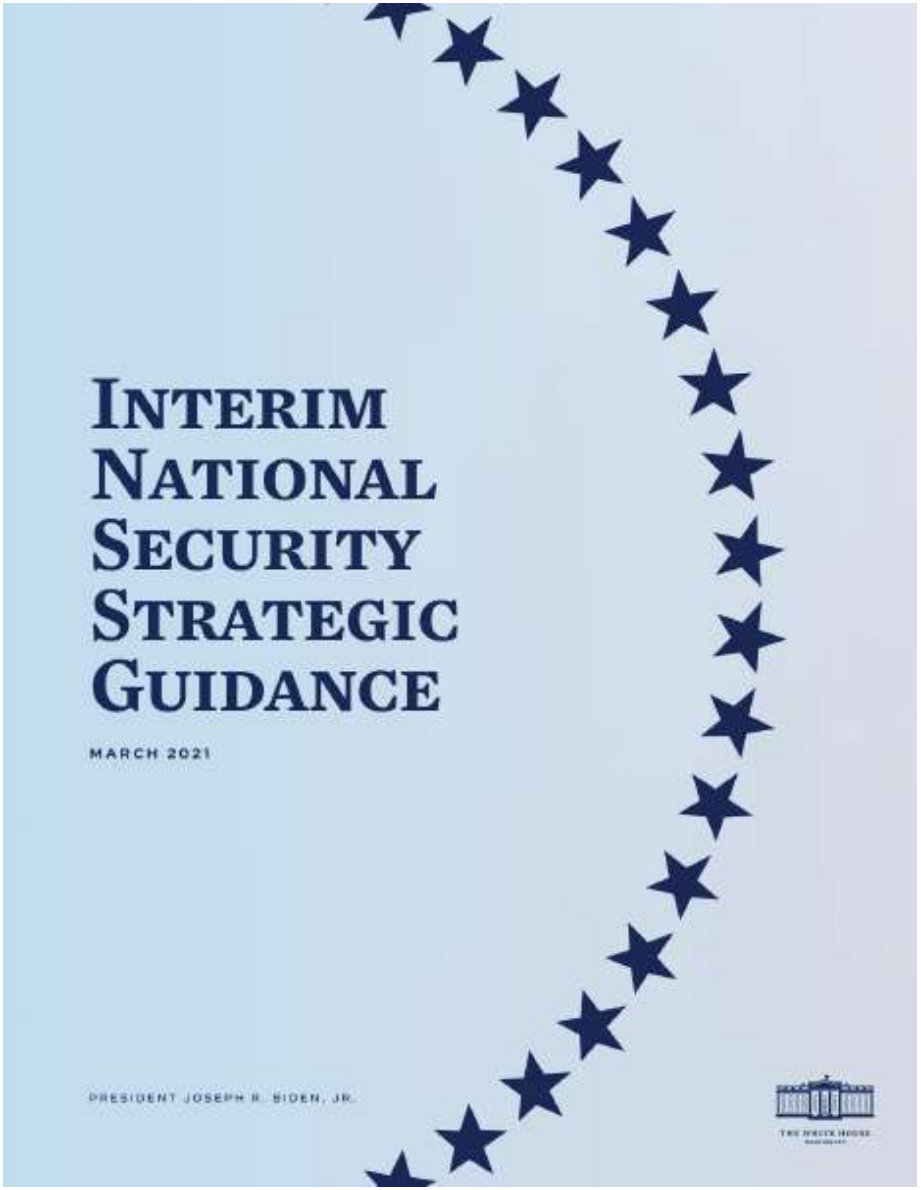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 '자유로운(free)' -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개방된(open)' - 역내 모든 국가들이 해상과 공중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안보 차원 - 영토 및 해양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 경제 차원 -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개방된 투자환경, 투명한 협력, 지역간 연결성 확대 등 포함

전략의 원칙

-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 존중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개방된 투자환경, 투명한 협약, 연결성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 항행의 자유와 영공 무해통항 포함, 국제법과 규범 준수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잠정안



글로벌 안보환경

- COVID-19 등 초국경적 안보 이슈
- 주요 국가간 힘의 배분상황 변화
- 동맹체제, 국제제도, 규범의 동요
- 첨단 핵심기술의 파생 위협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

- 미국인들의 안보
- 경제적 번영과 기회 확대
- 민주주의적 가치와 미국적 삶의 방식 수호

이행 전략

- 동맹 및 파트너십 재강화
- 국제제도와 공동체에서 리더십 회복
- 외교수단 우선, 군사력의 책임있는 행사

쿼드, 쿼드 플러스

- 쿼드 협력체의 기원은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동남아 '쓰나미 코어그룹'
- 2007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 연설에서 4개국 안보 대화(쿼드)를 제안
-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면서 다시 등장

바이든의 대북정책 및 비핵화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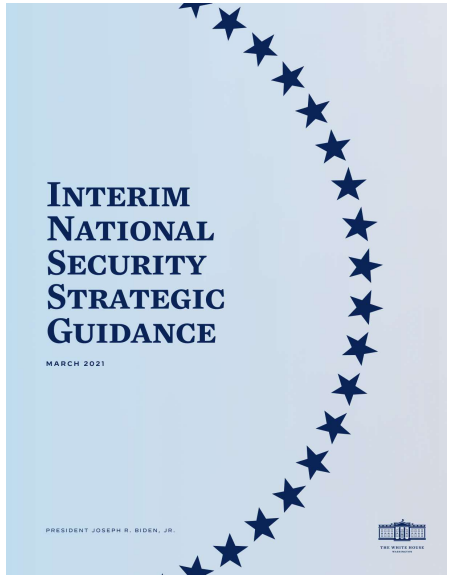
협상방식의 변화

-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직접 외교를 통한 '탑다운' 방식, 先 정상회담, 後 협상 방식을 선호했다면, 바이든은 북한의 선 태도변화와 철저한 실무적 준비, 후 정상회담 등 '바텀업' 전략
- 민주당 정권은 대체로 비확산 및 군비통제(arms control) 접근을 강조

전략적 인내 2.0?

- 전략적 인내 기조 하에서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될 전망임.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통해 대북 관여,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입장
- 가치외교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다시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

바이든 시대의 비확산 문제



핵심 비확산 어젠다

- 핵군축 및 비확산 레짐 개혁
  - 전반적인 레짐붕괴(regime meltdown) 현상 – 파리 기후협약, Open Skies Treaty
  - 미-러 INF 폐기
  - 미-러 New START
- 미국의 핵 보유고 감축
- 이란 JCPOA 안정화
-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 재개
- 비확산 레짐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 NPT, 핵무기금지조약(TPNW),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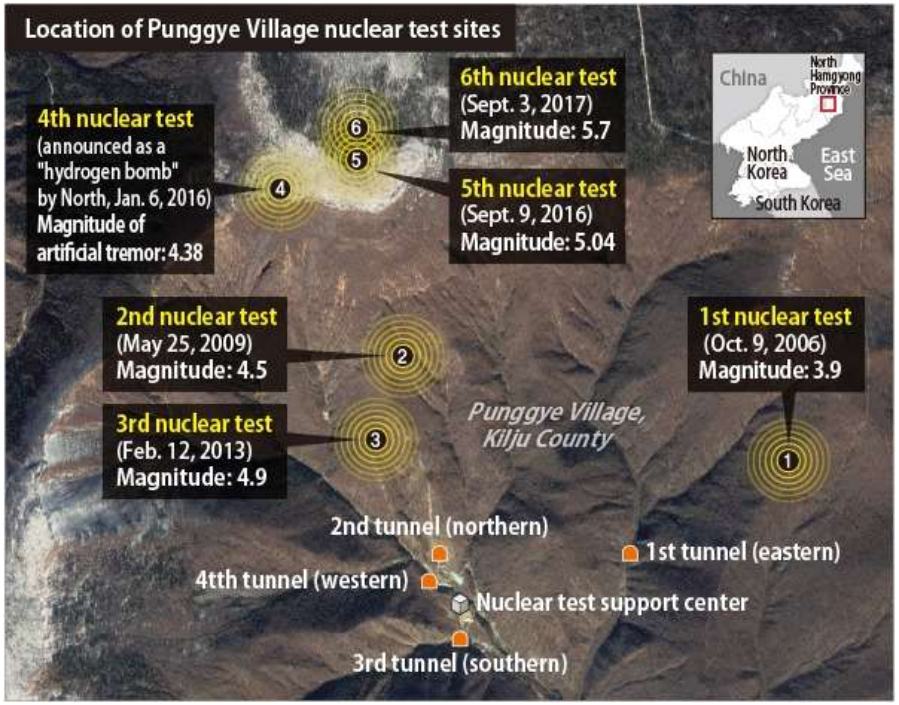
대북정책 개요

-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외교와 더불어 '강력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병행
- 트럼프식 일괄타결(grand bargain)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아닌 중간 정도의 균형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있고 이를 모색하며, 이는 미국·동맹국 및 주둔 병력의 안보를 증대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
-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되 북한이 특정 비핵화 단계를 이행할 경우 제재 완화를 제공
- 그와 함께 비핵화의 최종목표 달성 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
- 대북 접근법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기타 합의들에 기반

북한 핵실험 경과



회차	일시	장소	폭발력(추정)
1	2006.10.09	함경북도 풍계리	0.7 - 2 kt
2	2009.05.25	함경북도 풍계리	2 - 5.4 kt
3	2013.02.12	함경북도 풍계리	6 - 16 kt
4	2016.01.06	함경북도 풍계리	7 - 16.5 kt
5	2016.09.09	함경북도 풍계리	15 - 25 kt
6	2017.09.03	함경북도 풍계리	70 - 280 kt

- 김정은 정권 승계 이후 3~6차 네 차례 집중 핵실험 단행
- 갈수록 폭발력 증가, 기술적 진보 추정
- 6차 핵실험은 열핵폭탄(수소폭탄)일 가능성 큰 것으로 평가
- 향후 과제는 탄두소형화 및 대륙간탄도탄 탑재를 위한 재진입체(reentry vehicle) 기술 완성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정의

미국의 시각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 cf. FFVD, CVC (Toby Dalton, CEIP)
- 동결, 신고, 사찰, 검증, 및 해체
- 핵무기 (및 운반수단) 채제, 생화학무기, 핵 관련 인프라 시설 및 인력의 전환까지 포함

북한의 시각

-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의미
-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제거 –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 포함
-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요구 조건

2016년 7월 북한 정부 대변인 담화

- 남한 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공개
- 남한 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폐 및 검증
- 핵타격 수단의 반입 금지
- 핵무기 위협·사용금지의 확약
- 핵사용권을 쥔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북미간 실무접촉시 요구사항

- 미국 핵전략자산 한반도 철수
- 전략자산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중지
- 재래식, 핵무기 공격 포기
- 북미 평화협정 체결
- 북미수교

‘대북 적대시정책’의 중단이란?

정치적 측면

-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 체제 동요 시도를 중단
- 궁극적으로는 미북관계 정상화, 즉 국교수립

안보/군사적 측면

- 한반도 정전상태 종식, 이를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
-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훈련 중단

경제적 측면

- 미국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
- 대외교역 제한을 폐지, 북한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여건 제공

Joel S. Wit, “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 *The Atlantic*, May 20, 2018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추진

3단계 비핵화 과정

- 핵 동결 - 핵심은 영변 5MWe 실험용 원자로 동결
- 핵심 시설 불능화 - 우라늄 농축, 재처리 시설,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시설 등
- 무기 및 시설의 해체 - 핵무기 인프라 및 관련 인력의 민수분야 전환

미국의 상응 조치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 추가적인 한미 군사훈련 중단 - 혹은 최소한 군사훈련에 전략자산 동원 중단
-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철수
-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 경제 제재 해제
- 인도적 지원

한국의 핵 옵션: 전술핵과 핵개발

출처: 조선일보 (2017.9.8)

나토 배치 미 전술핵무기

조선일보, 2019.07.31

미-NATO 핵공유 체계

나토식 핵공유 체계 특징

핵계획그룹(NPG)에 의해 운영

-핵무기 정보 및 사용권을 미국과 실질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1966년 창설

-핵무기 운용 의사 결정, 핵전략 논의

-미국,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로 구성, 핵사용 여부는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

※미국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권한 행사한다는 시각도

미·나토 전투기 전술핵무기 운용 훈련

미 B-61 핵폭탄(모의탄) 인수·인계·장착·발진 훈련 정례 실시

한국 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철수 연혁

1958년	1967년	1976년	1977년	1985년	1991년
어네스트존 지대지 로켓, 280㎜포 등 배치 시작	전술핵무기 사상 최다 (950기) 기록	일부 미사일·로켓 철수 시작, 전술핵무기 540기로 감소	오산 공군 기지에 있던 핵무기 저장고 폐쇄	전술핵무기 150기 수준으로 감축	미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 100여 기 모두 철수

조선일보, 2019.07.3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 방안

북한 비핵화 목표 공유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개념, 같은가 다른가?
- 비핵화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합의

비핵화 방식의 조율

- 외교와 제재 투트랙 접근
-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조화
- 바이든 행정부 가치지향 외교와 북한문제의 sync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

- 북미 협상 정체는 남북관계의 정체인가?
- 한국이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

President Joe Biden, retired U.S. Army Col. Ralph Puckett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pose for a photo after Puckett was presented the Medal of Honor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한미정상회담 총평

한반도 안보 중심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 동맹의 성격 변화: 한반도 안보 단일 이슈 중심의 동맹체제 →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을 지향
- 지리적 확장: 한반도에서 동남아, 중미, 사이버우주까지 협력의 공간 외연 확대
- 이슈의 확대: 전통안보, 인간안보, 경제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번영의 파트너십

-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비전을 공유
- 포스트-코로나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협력 –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기술혁신, 백신 파트너십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반종빈, 장예진 기자 / 20210521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각종 국제 비확산 규범을 충실히 준수해 온 한국에 대한 신뢰를 반영
- 한국 방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지의 표현
- 달 및 우주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 등과 함께 우주개발 협력
-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독자적인 우주발사체 개발도 가능

한미 기술협력

한미 글로벌 경제·기술 협력

성과

- BBC(바이오·배터리·반도체) 공급망 구축
- 미, 한국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양자, 바이오 공동 연구
- '달 탐사' 등 우주탐사 협력

과제

-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처인 중국 시장 손실 대응
- 미, 반도체지원법안 의회 통과 등 실질적 인센티브 확정해야
- 미국 공장 증설에 따른 국내 일자리 우려 해소

동아 (2021.5.24)

- 첨단 자동차용 반도체, 중대형 배터리
- AI, 차세대 이동통신(6G), 데이터,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 Open-RAN 기술 등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쳐
- 첨단제도 및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 구축
- 투자협력 실무급 워킹그룹
- 아르테미스 약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과제는?

국익우선 외교와 한미동맹

- 한국의 정체성, 가치, 국익 개념 정립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 글로벌 어젠다, 경제안보

남북관계 정상화

- 대북정책 스탠스의 문제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관계

튼튼한 안보국방

- 동맹의 군사협력 – 연합훈련, 확장억제 강화, 핵전략기획 체제
-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방법
-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 방안 – 3축체제, 정보감시정찰 역량

// 끝 //

Q & A